

9.17

‘여성고용 할당제’ 공무원부터 도입

임용비율 대폭 늘리고 경찰직 등 제한 철폐

김대통령 지시따라...공기업에도 적극 권장

정부는 16일 앞으로 각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뽑도록 하는 이른바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여성의 채용규모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세무·경찰 등 일부 부처의 공무원 임용 관련규정을 철폐하고 △직급별·직렬별로 여성 임용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무관급(5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도 여성 임용비율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며 공무원 특채에서도 여성 채용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경우 여성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지는 않되 권장사항으로 정해 경영평가요소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민간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여성 고용규모 확대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념 노동부장관, 원진식 총무처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여성계·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여성고용할당제 도입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엔 여성회의 개최를 계기로 정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체의 모집단계에서부터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자당도 16일 김운한 대표위원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 등 후속조처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종구 박창식 기자